

# 악성 민원에 흥기 위협까지 벌벌 떠 공무원

###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이후 주거비 지원 규모·지급일 변경에 불만 폭언 일삼고 흥기 위협하다 검거...“공직자 보호 체계 재정비해야”

5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비 지원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자 복지 공무원들을 흥기로 위협,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광주 북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주택에서 A(54)씨가 자신을 찾아온 북구청 복지 공무원 일행을 흥기로 위협했다.

A씨는 집안에 있던 과도를 들고 10분 가량 '가만 두지 않겠다', '끝까지 가자' 등 협박과 함께 욕설을 했다.

갑에 질린 공무원들은 다급히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가 도움을 손길을 건네려는 복지 공무원과 갈등을 빚기 시작한 것은 올해 4월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직후부터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올해 초 지자체 긴급 복지 지원 사업 대상자로 지정, 두 달간 생계비·주거비 등을 받았다.

이후 구청 복지부서의 지원 대책 안내에 따라 4월

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으로 주거비 지원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20만 원 대로 줄었고, 지급 일자도 월세 내야 하는 날보다 늦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A씨는 “기초생활자 지정 이후 오히려 월세 자기 부담 부분이 생겼다. 주거비 만이라도 긴급 지원 제도로 기준으로 맞춰 달라”고 구청에 요구했다.

구청이 “행정 절차 상 불가능하다”며 거듭 난색을 표했고 지급 방식을 탄력적으로 검토까지 했으나 A씨는 막무가내였다.

급기야 기초생활수급지원 신청을 철회했다가, 구청의 간곡한 설득으로 올 7월 다시 지원 대상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반 년 가까이 수시로 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어 거세게 항의했고, 술에 잔뜩 취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폭언도 일삼았다.

복지 공무원들이 겨우 만류하고 설득해도 A씨의 폭언은 그칠 줄 몰랐다. 사건 당일에도 담당 공무원들이 A씨를 달래고자 자택에 찾아가다가 하마터면

화를 당할 뻔 했다.

경찰은 검거한 A씨가 ‘주거가 일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해당 복지 공무원들은 A씨의 언행에 정신적 고통을 토로하고 있으며 보복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민원이 악성화돼 범법 행위로까지 이어지는 일은 해마다 있을 만 하던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도로 보수 민원 처리를 소홀히 한다”며 북구청 야간 당직실에 돌을 수십여 차례 던져 유리창을 깨 50대가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에도 북구청 한 부서 사무실에서 ‘복지 지원 제도 신청 이후 절차가 늦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용 투병 가림막을 던져 공무원을 다치게 한 50대 민원인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관계자는 “주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라고 해서 합부로 대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인격체로서 존중 받아야 한다”며 “안전마저 위협하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는 제도·체계가 재정비 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전국 각 지자체를 상대로 민원인이 저지른 위법 행위는 2018년 1만 8525건에서 지난해 2만 6685건으로 44%가량 늘었다.

김희면기자



광주 동부소방, 소방활동 사진 전시회 운영

광주 동부 소방서(서장 송민영)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동구 관내 NC 웨이브ห้าง점(9층)에서 광주소방 활동 사진 전시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광주 남부소방, 소방관에게 감사의 편지쓰기 행사 운영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남수)는 관내 한국119청소년단 남부지회 4개단을 대상으로 ‘행복나눔 125’ 행사의 일환인 소방관에게 편지쓰기 행사를 13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선옥기자



광양소방, ‘쇼핑하GO, 체험하GO’ 119소방체험장 운영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불조심 강조의 달 집중홍보의 일환으로 지난 11일, LF스퀘어(광양점) 잔디광장에서 직접 체험하며 즐겁게 배우는 119소방체험장을 운영했다고 전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강진소방, 강진·함양 의용소방대 연합회 자매결연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지난 10일 강진소방서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함양군 의용소방대와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여수소방, '119 소방안전체험 한마당' 운영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지난 11일 여수엑스포장 디지털갤러리에서 열린 전라남도여성교육지원청 주최의 행복한 꿈 키움 한마당 행사장에서 '119 소방안전체험 한마당'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여수=기동취재본부



해양경찰교육원-충북소방본부, 업무협약 체결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성수)는 지난 10일 충북안전체험관(청주시 소재)에서 충북소방본부(본부장 고영국)와 해 육상 대국민 재난안전 체험교육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수권기자

## ‘나 몰래 전입신고 안 돼’...전입신고 신분확인 강화한다

### 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집주인이 세입자 주소를 다른 곳으로 몰래 옮긴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입자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 반드시 전입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둘째,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하는 등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단,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셋째,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넷째,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됐으나, 이를 개정해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는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표기 방법도 개선한다.

전입세대확인서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주회 결과가 다를 수 있는 점을 약용한 대출사기가 있었다. 이에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오유나기자



‘수능 고득점을 기원하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4일 대구 중구 천주교 대구대교구 성모당에서 열린 ‘수험생 응원 미사’에 참석한 수험생 학부모들이 수능 고득점을 기원하며 촛불을 켜고 있다.

## 울산·경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마 판매한 일당 5명 구속

울산과 경주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마약류인 대마를 판매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이 해양경찰에 들미를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외국인 A씨 등 6명을 검거해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울산과 경주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접근해 대마를 판매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면서 지인이나 SNS를 통해 대마를 구입해 선원, 일용직 등으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되팔았다.

또 주거지 화장실 등지에서 대마를 담배에 말아피우거나 직접 제작한 도구를 이용해 상습 흡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들 대부분 비교적 발음이 쉬운 방문취업(H-2)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했거나 변경 준비 중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해외동포 3세대인 것으로 해경 조사에서 드러났다.

울산해경은 앞서 올해 2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대마를 판매하는 외국인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해경은 A씨 등에게 대마를 주기적으로 공급해 준 상선과 판매책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육한 울산해경서장은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수, 밀입국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선옥기자